

弘報室 : (02)
6050-3603~6

- * 이 자료는 1/27(火)자 朝刊이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6(月) 12:00 이후부터
- 행사 일시 및 장소: 1/26(月) 12:00~13:30, 상의회관 챔버라운지(20층)

※ 문의 : 경제연구실 이경상 실장(02-6050-3471), 이종명 과장(02-6050-3472)
회원서비스팀 오주원 팀장(02-6050-3421), 선병수 과장(02-6050-3425)

崔부총리-경제계 “경제재도약 마지막 기회” 구조개혁 한목소리

- 대한상의, 경제혁신·활력회복 위한 5+5 제언 ... 최경환 부총리-상의 회장단 간담회
- 崔부총리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구조개혁 없어” ..朴 상의회장 “구조개혁 킁핀 규제개혁”
- 재계실천(5): 신산업부문 선제적 투자, 1만개 혁신공장, 농어업-상공업 상생협력 등
- 정책제언(5): 한국판 ‘원샷법’ 제정,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최경환 부총리와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구조개혁의 한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혁신을 위한 정부와의 팀플레이를 비롯한 실천계획,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등 정책제언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등 신흥국은 경쟁적 구조개혁을,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우리경제는 新샌드위치 위기”라며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

실천계획

- 경제계-정부 팀플레이
- 신성장부문 선제적 투자
-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 농어업-상공업 상생협력
- 경제계-국회 소통 강화

정책제언

- 경쟁국수준 기업환경 개선
- 한국판 ‘원샷법’ 제정
-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 역시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의 킁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동감했다.상공인들은 ‘지난해 경제팀이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갖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는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설득도 필요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높은가지의 열매를 따 주기를 주문했다.

상의 회장단, 경제혁신 5+5 제언문 崔부총리 전달 ...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만든다

이날 전국상의 회장단은 올해는 경제혁신의 얼마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며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최경환 부총리측에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5+5 제안의 첫번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부총리-경제계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경제혁신과제를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긴밀히 해 나가자는 것이다.

‘준비된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온다’. 회장단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중FTA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된만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U턴을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상명하복, 연공서열 등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창의적 문화로 확 바꾸고,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13~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한다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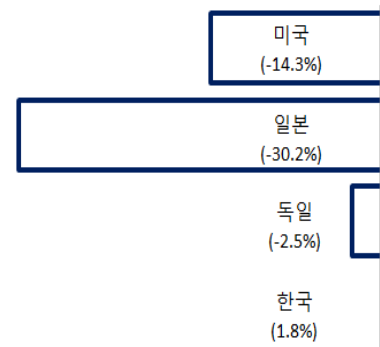
경제계는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실천, 농어업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경제계가 조속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SOC민간투자법 등이다.

“16년전 日제조업 살리기 ‘원샷법’ 제정”... “지방의 군사문화재보호 관련 투자어로 해결”

5개 정책과제 건의중 첫 번째는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OECD 국가중 4번째로 세고, 지난 10년간 미국(-14.4%), 일본(-30.2%) 등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했지만 우리만 임금체계의 성과급형 개편지연 등으로 지속상승(1.8%)해왔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자료: 美 노동통계국)



16년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제언문은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재기업들의 투자애로도 나왔다.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 보호구역은 공장 신증축을 포함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에서는 작은 물류창고를 짓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도 했다. 제언문은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원천 확보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며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독일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그 배경”이라며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플랜B도 요청했다. 그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얘기다. 회장단은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시한(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

의를 중단하지 말고 외국선례(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별도 절차를 마련해 구조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5년이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제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주)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